



윤석열 정부의 위기
2면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한일 관계
3, 4, 5면



SVB, 크레디스위스 파산과 금융 위기
7, 8면



한일 합의는 한미일 부자·권력자들을 위한 합의다

〈노동자 연대〉 정규 호(453호)에는 특별 호외에 실리지 않은 기사들이 더 있습니다.

-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파업 •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보안법 탄압 반대 •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 민주주의 정상회의 • 일제 전쟁 범죄 문제 제기가 “배타적 민족주의?” 등

오직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만 발행하는

노동자 연대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노동자 연대〉 신문이 윤석열 퇴진 목소리를 더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정기 후원 신청

일제 강제동원 해법, 노동시간 연장

윤석열 정부, 위기에 처하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대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0퍼센트대로 올랐다.

3월 6일에 발표한 두 방침이 발단이었다. 하나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 연장안(주 69시간)이었다.

미·일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내팽개치고, 노동시간을 늘려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던 것이 모두 커다란 반감을 사고 있다.

윤석열은 노동시간 연장안은 일단 뒤로 미루는 꾀수를 부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 등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해 난관을 벗어나려고 한다.

윤석열은 한일 관계 회복과 노동시간 연장이 모두 국익에 이롭고 특히 청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했다. 대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강제동원 해법 발표 전에, MZ세대가 한일 관계 회복을 지지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은 두 문제 모두에 크게 반발했다.

두 전선 모두에서 공세를 펼치기 어렵다고 본 윤석열은 주 69시간 방안을 일단 철회했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자칫 윤석열 퇴진 투쟁과 만날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다.

이재명 기소는 정적 제거 시도일 뿐

검찰이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장동과 성남FC 건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은 최근 윤석열의 대일 외교를 맹공격해 왔다.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재명 공소장은 확증 제시가 없던 이전 구속영장과 대동소이하다.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을 새삼스럽게 증폭시켰던 이재명 대선 자금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기소 혐의에서 제외됐다.

윤석열과 검찰은 직접적 증거의 제시 없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하며, 정치적 경쟁자 압박에 검찰 기소 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런 야비한 압박에도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가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것이다.

한일 강제동원 합의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교수, 종교인 등이 윤석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좌파 정당들이 민주당과의 전략적 야권연대를 위해 애국주의적 항의(“굴욕 외교”)나 총선 심판론에 머무는 것은 기회의 낭비다. 정부에 배신당했다는 정서가 반제국주의, 윤석열 퇴진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참하고 특히 이를 노동자 투쟁들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책무다.

정치적 반대 세력 압박 강화

지난 30년간 진행된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 증대 때문에 한국의 미국으로의 경도는 모순을 자아낼 것이다.

무역협회장 구자열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의 협력 공고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만, 우리 최대 교역국인 중국도 절대 버릴 수 없는 시장이다.”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모순 때문에 한국 지배계급에게는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부담과 고통을 노동자 등 서민층에 전가하는 것이 사활적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반대 세력

들에 대한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려고 한다.

검찰은 민주노총 현직 간부들이 포함된 서울 지역 간첩단 혐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우파 언론들은 북한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관련 기사: 5면 기사를 보시오)

윤석열은 2월에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격려한 데 이어 3월 22일 국군 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를 방문했다. 윤석열은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격려했다.

윤석열 정부의 단순한 고려

노동시간 연장 개악이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사용자들의 불멘소리가 나왔지만, 그들 다수는 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5대 재벌 총수들이 윤석열의 방일에 동행했다.

윤석열의 대일 외교는 한국 지배계급과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강제동원 해법 발표 직후 주미대사 조태용은 이렇게 말했다.

“[강제동원 해법] 결정은 한국과 일본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이는 미국과 우리의 관계,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 강점 과거사를 덮고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관련돼 있고,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질서의 유지에 기여해 이익을 얻겠다는 말이다.(▶ 관련 기사: 8면 기사를 보시오)

미·중 제국주의간 갈등 속에서 미국은 동맹들과 경제적·안보적(지정학적) 관계를 강화해 중국을 포위·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 전선 구축(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

일본 총리 기시다는 한일 정상회담 직후 도쿄에서 독일 총리를 만난 데 이어 인도·우크라이나·폴란드 등을 연달아 방문했다. 시진핑이 푸틴과 만난 바로 그 시점에 말이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껄끄러운 관계는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지원해 한국 자본주의의 위상을 높이고 활로를 찾으려 하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시급한 해결 과제였다.

미국은 이 과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한국 정부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수행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특히 미국 중심의 새로운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이 자칫 소외될 수 있다는 압박이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원천 기술과 소재·부품·장비 등은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 점점 더 유착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필요성을 자각했을 것이다.

윤석열은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윤석열의 이런 행보에 대한 보답으로 기시다는 올해 5월 G7 회의에 윤석열을 공식 초청했다.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 연습에 연일 최첨단 무기들을 선보여 한국 지배자들을 달래고 있다. 6월에는 첨단 전력을 총동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미국은 한일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삼성·SK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결정도 발표했다.

한국 지배계급의 핵심 부분들이 지지하는 대외 노선을 “굴욕 외교,” “매국,” “제2의 경술국치”라고 비판하는 것은 국가 담론 이면에 있는 진정한 계급 이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미일 동맹 강화는 한미일 지배계급들에 이로울지라도,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평범한 대중을 큰 위험에 빠뜨린다. 애국심이 아니라 계급적인 국제주의 관점에서 반대해야 한다.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이 글은 3월 22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 QR코드)의 발제문이다.



일제 강제동원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소위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골자는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이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다음 해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했습니다.

한편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법적 지위는 연장이 아닌 “종료 유예”라는 불완전한 상태로 지속돼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한일 갈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은 제3자 변제안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일본 기업들이 내야 할 돈을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수십년 동안 싸워서 얻어낸 배상 판결을 정부가 외교적 해법이라면서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렇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무참히 희생시키고는, 엿새 전인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해법’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 그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온전한 이행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가 당시 일본 총리 아베와 맺은 것입니다. 그 합의는 위안부 전쟁 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해야 할 법적 배상을 위로금으로 대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와 아베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측이 독도에 관한 논의도 제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측은 논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또한 올 상반기 중에 강행될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일본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해 수십년 동안 싸워 오셨다

굴욕 외교?

이처럼 한일관계 개선을 앞세워 자국민 피해자들을 냉혹하게 내친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대중 속에서 큰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합의 철회를 요구하는 수천 명 규모의 집회가 여러 차례 열렸고, “친일파 윤석열을 몰아내자”라는 구호를 내건 윤석열 퇴진 집회의 규모도 점점 커져, 가장 최근에 열린 집회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주요 좌파 정당인 정의당과 진보당도 모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요구하고 한일 정상회담 합의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 규탄 운동은 더 많은 지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애국심이 아니라 반제국주의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주요 진보 세력 지도부들은 윤석열의 “굴욕 외교”를 비판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빈손도 아닌 청구서만 잔뜩 받아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윤석열의 친일 정책이 “외교적 자율성”을 잃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신냉전 전략에 종속시킨다면서 말입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도 “우리가 얻은 국익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은 반면 한국은 전쟁 위험과 경제 파탄이라는 이중고를 얻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국익”에 근거해 윤석열의 “굴욕 외교”를 비판하는 주장은, 좋은 정부라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익과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관계사를 돌아보면,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 맺힌 외침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와 ‘국익’에 밀려 항상 짓밟히고 외면당해 왔습니다. 독재 정권과 그를 승계한 우파 정

부들뿐 아니라 민주당 정부도 그 일부였습니다.

왜 과거사 문제는 이토록 오랜 세월 해결되지 못하고 외면당해 온 걸까요?

역대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보다 국가적 한일관계를 우선해 온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때 식민지-피식민지 관계였던 한국과 일본의 지배계급들은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제국주의적 후원하에 경제적 및 지정학적으로 매우 긴밀한 유착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역사는 단지 양국간 관계를 넘어 서방 제국주의가 전개돼 온 더 큰 맥락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곧, 일본과 한국

“굴욕 외교” 비판하는 민주당·노동계 정당 지도자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

이정미 정의당 대표

“외교적 자율성 포기”



윤희숙 진보당 대표

“우리가 얻은 국익은 없다”

을 동맹으로 삼아 경쟁 상대를 견제하고자 했던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 속에서 전개돼 왔습니다.

한일협정의 배경과 한국 지배계급의 이해관계

1960년대 초 이후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어 당시 소련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삼았는데, 일본은 미국의 지원과 한국 전쟁 특수(特需) 덕분에 연합군 군정 종식(1952년) 이후 10년 만에 경제 강국으로 다시금 도약했습니다.

그러한 일본을 방어하는 일에 한국이 중요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대소련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파트너로서 이 동맹 질서에 편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확립되려면 한일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했습니다. 두 국가가 하루빨리 전후 배상 문제를 마무리짓고 국교를 맺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이 한국의 자본 축적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일본 측이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저리의 자금을 대출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일본도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와 경제 개발 자금 저리 대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의 희망에 호응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1965년 한일협정과 그 부속 협정인 한일청구권협정이 타결됐습니다.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에 미국



강제동원 피해자를 짓밟고 기뻐하는 윤석열과 기사다

은 제3의 당사국이라고 할 만큼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당시에 박정희는 일본이 경제개발 자금을 저리 대출해 주는 대가로 강제 동원 등 일제의 식민 지배 피해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해 주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박정희 정부도 한일협정으로 건네진 돈을 피해자들의 청구권 몫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이 받은 돈에서 피해자 지원에 쓰인 돈은 무상 지원금 3억 달러 중 겨우 5.4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경제 성장이 사활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엄청난 저항을 감수하고라도 경제개발을 위한 일본의 원조를 얻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한·미·일 동맹 질서에 편입되면서 경제 성장, 즉 자본 축적

을 구가했습니다.

식민 지배 역사와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혈값에 불과했지만, 당시 8억 달러가 넘는 일본의 개발 자금은 한국의 수출 총액이 고작 2억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 이후 한국의 재벌들은 일본의 차관과 기술에 힘입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두 나라 정부와 기업주들 사이의 인적 관계도 긴밀해졌습니다.

이렇게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는 미국 제국주의 하에서 한·미·일 지배계급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한일관계의 본질적 성격을 형성하고 규정한 기초가 됐습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 안 되는 이유

1990년 이후 세계 질서는 또 새로운 구도로 변했습니다. 옛 소련 블록이 붕괴한 것입니다. 미국이 냉전의 승리자가 돼 세계적 패권을 과시했습니다. 하

지만 곳곳에서 새로운 모순과 긴장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일 위안부와 강제 징용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가 거둬 피해자들 가슴에 못을 박는 방식으로 뒤틀린 배경입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990년대부터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2위에 올라섰고, 군사력도 빠르게 증강해 2011년 중국 국방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독보적인 세계 패권을 과시해 온 미국의 위상을 흔드는 동시에, 아시아의 최강대국이던 일본의 위기감을 특히 증폭시켰습니다.

이런 세력 관계 변화에 대응하고자 미국은 2010년대 초부터 대외 정책을 변경해 주로 중국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동맹을 재구축했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낀 일본 지배계급은 헌법을 개정하거나 해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공격형 군사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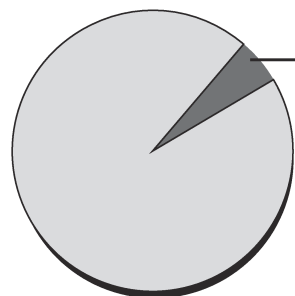
미국 패권 전략 하에서 추진된 1965년 한일협정



박정희

일제 피해자
배상·사과 없이
최종 합의

한국 경제 개발
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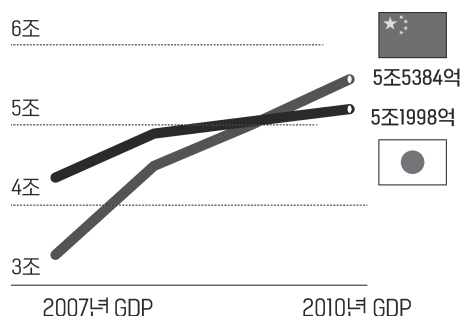


일본의 무상 지원금 3억 달러 중
피해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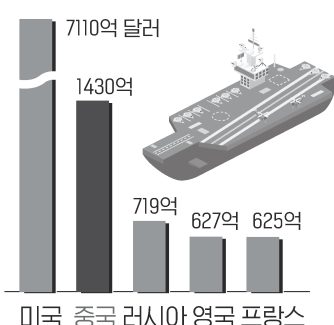
5.4%

1990년대 이후 급성장한 중국

일본 제치고 세계 경제 2위



2011년 국방비 세계 2위



국익 관점에서 국민 위해 내린 결론

을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2015년 중국의 국방비는 일본 방위 예산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해 아시아 전체의 38퍼센트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은 미일방위 협력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미일 군사협력의 지리적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군과 작전을 벌일 수 있게 한 것인데, 핵심은 중국에 대한 억제력 강화였습니다.

그 즈음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 법제도 도입했습니다. 이는 동맹국의 전쟁에 자위대를 동원할 수 없게 한 일본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재무장 강화 속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 미화 프로젝트도 강화했습니다. 2015년 8월, 당시 총리 아베 신조는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해 "전쟁 이전의 강한 일본을 되찾자"고 천명했습니다. 침략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가 아닌 재현해야 할 영광"이고 아시아에 이로온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화를 지지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시아로 중심축을 옮기며 동맹 재구축으로 나아가던 2011년, 마침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피해 배상 소송이 이어지는 등 과거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현재는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위안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한일 간 곤란한 역사 문제의 해결을 희망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과거사가 동아시아 동맹 재구축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박근혜와 아베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1년 한국 헌재 판결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반동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위로금 10억 엔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서둘러 선언했던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바იდ든은 이번 강제동원 합의 직후 한밤중에 입장을 발표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을 열었다"며 극찬했는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도 가장 크게 기뻐한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성

한국의 지배계급은 자체의 이익("국익")을 위해 미국과 일본의 지배계급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더는 일본이나 미국의 종속국이 아니라 세계 10위권의 산업국이 됐습니다.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지배계급

은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의식해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서방에 더욱 협조하는 식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활로를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고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한미일 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교차하는 등 긴장이 쌓여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지배계급은 전통적 동맹인 미국·일본의 더 밀접한 동맹이 돼 지정학적 및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윤석열의 외교를 그저 굴욕과 무능으로 여기면, 한국 지배계급 전체의 친제국주의적 성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가려지게 됩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서로 경쟁하는 세계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적 국가 체제를 문제삼지 않고 그저 외교의 대등함과 자주성만 문제삼아서는 문제가 조금치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윤석열의 강제동원 합의 철회를 요구하고 심지어 거리 집회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는 그들과 공동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잃게 되면 운동의 지평과 전망, 요구와 투쟁 수위, 전술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성의 핵심은 필요한 비판을 삼가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민주당은 한일 합의 배후에 미국의 제국주의적 후원과 압박이 있다는 점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한국 측이 일본 측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점은 맹렬하게 비판해도, 일본의 제국주의와 단절할 생각 자체는 그들에게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도 한국 지배계급에게 낙점 받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민주당은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의 대일본 외교도 배신적이었거나 배신에 가까운 기회주의였다는 점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이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가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때에도 진보적 애국주의 운동은 문재인하에서 그랬듯이 정부에 협조하고 심지어 애국적 쟁의 자체를 결의할 것입니까?

반제국주의 국제 연대

이제 애국주의적 접근은 반제국주의적 국제 연대의 가능성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 대해 얘기하면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이 보통의 한국인들의 이익이 아니듯이,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것도 보통의 일본인들에게 이익이 아닙니다.

일본 지배자들이 미화하는 과거 제국의 역사 중에는 일본 노동자들이 전쟁의 전방과 후방에서 죽음에 내몰리고 가혹하게 착취당한 역사도 있습니다.

제국주의 체제에 맞서 일관되게 싸우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주체는 국제 노동계급입니다.

한일 노동자들이 한일 지배자들의 제국주의적 협력과 한미일 동맹을 반대하고 대중 운동을 벌여 한일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들에 제동을 건다면, 그것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 노동계급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카를 마르크스는 말했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토론회 시청자 발언과 정리발언도 포함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베-오바마-박근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배후에도 미국이 있었다

부동산 대출 부실로 또다시 고조되는 금융 불안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의 대형 은행 크레디스위스까지 부도 직전에 매각되면서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사업 대출의 부실이 심화돼 금융권을 강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7만 5359호로 10년 2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2만 1727호에서 1년 만에 5만여 호나 더 늘어난 것이다.

전 세계 금융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지만, 3월 22일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며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퍼센트에 달하게 된 것이다.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연내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보다 1.5퍼센트포인트나 높아졌다. 지난 2000년 5~10월 이후 22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올린다면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처럼 금리가 계속 오르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도 악화하고 있다.

나이스(NICE)신용평가가 주요 건설 회사 11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 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는 총 95조 원에 달했다. 반면, 이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은 12조

원에 불과했다. 특히,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은 부채에 비해 현금 보유량이 적어 위험 기업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건설 회사들의 부실은 곧 금융 회사들의 부실로 이어진다. 특히 부동산 PF는 은행보다 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 대폭 늘어나 이 회사들도 위험에 처하게 됐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위험액은 2018년 말 94조 5000억 원에서 지난해 6월 말 191조 7000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들은 은행보다 규모가 작다 보니 부실이 발생할 경우 버틸 여력이 크지 않다.

게다가 이들 금융기관 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증권사 연체율은 2021년 말 3.7퍼센트에서 지난해 9월에는 8.2퍼센트로 높아졌고, 저축은행은 1.2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보험사는 0.1퍼센트에서 0.4퍼센트로 상승했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가 대출해 준 부동산 PF가 급증했고, 대출 연체액 또한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집값이 급락한 지난해 하반기까지 대출을 대폭 늘려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부실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체율

이처럼 제2금융권의 부실 문제가 다시 부각되자 정부는 제2금융권과 건설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3월 초에는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어 건설사들과 금융회사들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수십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



고금리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증권사·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의 대출 부실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했는데도 금융 불안정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나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직접 돈을 투입하지는 않고 은행들을 동원해 대출을 연장해 주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나서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기업들의 부실 채권을 인수해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뜻한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직접 금융시장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것은 해외 금융시장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오히려

한국의 금융 불안정을 시인하는 신호가 돼, 외환위기나 정부재정 위기의 확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달 무역수지는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 나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10일까지 무역적자는 227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해 이미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48퍼센트나 됐다. 무역적자의 확대는 외환위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계속 미봉책을 내놓으며 시간을 끌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터질 수 있는 대형 위기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리 급등으로 한계에 내몰리는 서민층

3월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점차 상승했다.

또, 전체 가구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1년 29.4퍼센트에서 올해 2월 34.5퍼센트로 높아졌다. DSR은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전체 가계대출자 중 소득의 70퍼센트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비중이 15.3퍼센트나 됐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고금리로 생계난을 겪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월세나 신용카드 대금 지급 등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지만 대출을 거절당하기 일쑤다.

최근 정부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개시하자 신청자가 폭주해 대출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자율이 16퍼센트나 돼 정부가 고리대를 놓는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기업 금융 지원에는 수십조 원을 저리로 지원하는 정부가 서민 소액 대출에서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을 보면 정부의 우선순위가 잘 드러난다.

당장 생계난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저리 대출을 대폭 늘리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고물가·고금리에 맞서, 금리 인하와 부채 탕감, 임금 인상을 위한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금융 위기

최근의 금융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중앙은행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다.

지난 2007~2008년 금융 위기 때 중앙은행들은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돈을 푸는 것으로 대응했다.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채권을 대거 사들이는 방식으로 통화를 창출해 은행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중앙은행들은 2009년의 큰 불황이 1930년대의 대불황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당시 세계 금융 위기의 궁극적 원인은 낮은 이윤율이었다. 낮은 이윤율이 생산적 투자를 둔화시키고 금융 투기를 부추긴 것이다. 규제 조처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본들의 대규모 파괴를 피하는 것으로, 건전한 상태로 이윤율이 회복되는 것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세계경제 시스템은 계속 저금리와 양적완화에 의존했다. 2013년과 2018년에 금융을 “정상 상태”로 돌려 놓으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시도는 실패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에 2007~2008년보다 더 큰 규모로 금융 시장이 경색되자 중앙은행들은 양적완화를 확대했다. 중앙은행들은 정부가 소득과 일자리를 보전하는 데 쓸 돈을 찍어 내기도 했다. 극성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지난 15년 내내 이 추가적인 통화가 물가 상승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2021~2022년 실제로 물가가 급등했을 때 그것의 주된 원인은 생산 시스템에 있었다.

팬데믹은 오늘날 세계경제를 엮어 주는 공급 사슬을 교란시켰다. 가구들이 록다운에 대응해 소비를 늘린 것도 물가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동아시아 나라들이 석탄에서 벗어나면서 천연가스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은 신자유주의 정



세계경제는 그간 저금리로 지탱해 왔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을 강행 중이다

설에 따라, 즉 물가 상승이 마치 지금껏 경제에 풀린 돈 때문인 것으로 취급해 물가 상승에 대응했다. 그에 따라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다.

이것은 가차없는 계급 정치[지배계급 측의 계급 정치 — 역자]를 실천한 것이었다. 실업률을 높이고 임금을 억제해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이윤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금융 시스템의 여러 부분들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는 지난가을 당시 영국 총리 리즈 트러스와 그의 재무장관 퀴지 콰팅이 감세 정책에 판돈을 걸자 영국 국채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 것에서 처음 드러났다. 당시 영국 국채에 큰 돈을 투자한 많은 연기금이 붕괴 위기에 빠졌다.

10일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도 그런 사례다. SVB는 캘리포니아 북부의 IT 기업들을 상대로 한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었다. 신생 스타트

업 기업들은 수익을 내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들은 초기에 벤처 자본에게서 받은 대출에 의존한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렇게 대출받은 자금을 SVB에 예치했다. SVB는 이를 미국 정부가 발행한 장기 채권에 대거 투자했다. 그 채권은 금리가 아주 낮을 때는 그보다 약간 높은 이자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자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예금자들은 예치한 돈을 회수했다.

영화 <멋진 인생>(2020년 12월 말에 미국에서 재개봉돼 흥행한 1946년작 영화 — 역자)에서 묘사된 1930년대 불황기의 뱅크런이 디지털 시대에 재현된 셈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SVB가 무너지자 예금주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부유한 정치 자금 기부자들과 함께 자신들을 구제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로비하는 데 광분했고, 미국 정부는 13일 구제에 나섰다. 그러나 사태는 계속 악화됐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투기꾼들이 시스템의 약한 곳을 탐색해서 득을 보려고 하면서 사태가 악화된 면도 있었다. 그런 표적의 하나가 지난 몇 년 동안 잊지 못할 스캔들로 곤욕을 치러 온 스위스의 크레디스위스 은행이었다. 크레디스위스는 스위스 중앙은행에게서 54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은 뒤, 경쟁사인 UBS에 인수됐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속도위반 결혼”으로 묘사한 이 인수 조치에도 금융 시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크레디스위스가 발행한 17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은행 채권의 보유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 SVB의 구제는 가장 큰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투자자들과 예금주들은 중소 은행을 떠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소 은행들은 자신들도 보호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시스템의 관리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만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패닉을 자아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계속 금리를 높이면 금융 시스템에 더 큰 타격을 줄지도 모른다.

출처 Alex Callinicos, “No easy way out from banking crisis”, (2023. 3. 20)

▶ 8면에서 이어짐

뱅크오브아메리카도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 손실이 2022년에 16퍼센트에 달했다. 이는 SVB와 같은 수치이다(마이클 로버츠, ‘Bank busts and regulation’).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채 가격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져 이와 같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 하

락, 신흥국으로 투자했던 자금 회수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수년간 기업들의 이윤율이 낮은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저금리로 경기를 부양해 왔다. 그러는 동안 커진 금융 거품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꺼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곳곳이 지뢰밭인 것이다.

지금 지배자들은 금리를 올리면서

도,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은행들에 막대한 지원을 하며 구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고액 자산가들의 예금도 보장해 주고 은행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스위스 정부도 크레디스위스를 인수한 UBS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고금리로 서민층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고 있다. 은행

구제자금도 파산 위기에서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다. UBS는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고도 크레디스위스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할 계획이다.

지배자들은 이전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고장난 금융 시스템을 지키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그 고통은 노동자 등 서민층에 떠넘기고 있다.



SVB, 크레디스위스...

계속되는 금융 위기, 연준의 금리인상은 더 큰 위기 부를 것

(미국 중앙은행)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후에도 은행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했고,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은 1달 전보다 주가가 90퍼센트 하락했다.

설립된 지 167년이나 된 대형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는 파산 위기를 겪다가 불과 며칠 만에 스위스의 경쟁은행인 UBS에 합병됐다. 크레디스위스가 파산할 경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라더스 파산보다 큰 파장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 때문에 스위스 중앙은행은 UBS에 1000억 스위스프랑(14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합병을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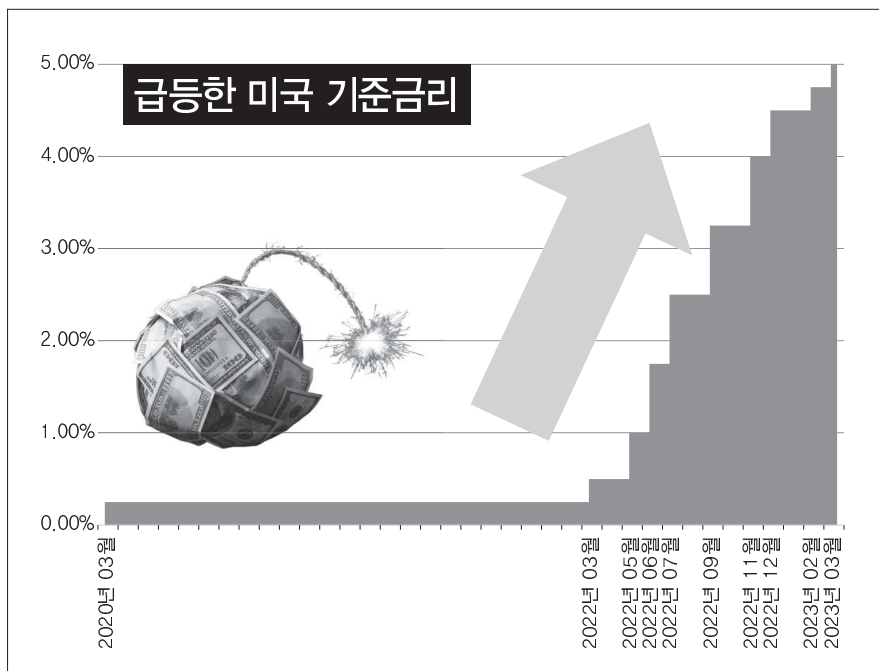
합병 과정에서 크레디스위스 주주들은 자산을 일부 회수할 수 있게 됐지만, 크레디스위스가 발행한 고위험 채권(코코본드) 23조 원어치가 휴지조각이 됐다. 그래서 이 채권을 많이 보유한 금융기관들의 주식이 하락하며 후폭풍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400조 원에 달하는 코코본드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면 은행 위기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처럼 세계 금융 시장의 불안정이 심각한데도 3월 22일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은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5퍼센트에 이른다. 연준 의장 파월은 올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리려 하고, 연내에 금리 인하는 없다고 밝혔다. 유럽 중앙은행도 얼마 전 금리를 0.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겠다는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금리 인하나 양적완화 같은 통화량 증가 정책 때문에 물가 인상이 벌어졌다고 보면서, 금리를 인상해 통화 공급을 줄이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물가 인상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과 비용 증가의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며 이윤을 추구한 기업주들 때문에 벌어졌다. 올해는 경기 침체의 여파 속에 원자재 가격은 다소 떨어졌지만, 그간의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와 기업들의 시도는 계속되며 물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올해 물가 인상의 주요 요인인 것처럼 말이다.

특히, 지배자들은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 투쟁을 촉발하고 이게 다시 물가를 끌어올릴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경제를 어느 정도 침체시켜서라도 임금 상승을 억제하려 한다.



그러나 물가 인상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돼 왔다. 미국에서도 올해 2월 실질임금은 지난해 대비 2퍼센트가량 깎였다.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볼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보다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증폭시키며 은행 위기를 키우고 있다.

예외적인 사례?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파월은 SVB 붕괴는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예외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러나 SVB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금융기관은 한두 곳이 아니다.

SVB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SVB는 '안전 자산'이라고 여겨지는 미국 국채에 자산의 상당부분을 투자했지만, 국채 가격이 하락하며 위기에 빠졌다.

미국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은행들의 자산 손실은 6200억 달러(약 821조 원)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7퍼센트에 이른다. 미국 은행 중 10퍼센트가 SVB보다 더 큰 자산 손실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위기는 단지 중소형 은행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JP모건체이스의 조사를 보면, 미국 주요 은행 중 하나인

▶ 7면으로 이어짐

용어설명

코코본드

2008년 위기 이후 만들어진 신종 자본 증권을 지칭하는 말.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거나 갚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서 고위험 채권으로 분류된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민족과 민족주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한일 강제동원 합의를 계기로 살펴봅니다

3월 29일(수) 오후 8시

발제 **김영익**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참가신청 bit.ly/0329-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